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0-8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I]

2020. 6. 25.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I. 추진배경	1
[참고1] 1인가구 변화 특징 및 증가 원인	2
II. 5대 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시사점	3
III. 1인가구 대응 정책 방향 및 고려사항	6
[참고2] 주요국 1인가구 규모 및 관련정책 현황	8
[참고3] 지자체별 1인가구 지원정책	9
IV. 주요 추진과제	10
1. 5대 분야 생활기반별 맞춤형 대응	10
2. 1인가구 실태파악 강화	24
V. 기대효과 및 변화된 모습	26
VI. 추진 계획	27

I. 추진배경

① 1인가구가 '15년 이후 주된 가구형태化, 향후 지속 증가 전망

○ 1인가구 비중 가파르게 증가 → '15년 이후 주된 가구형태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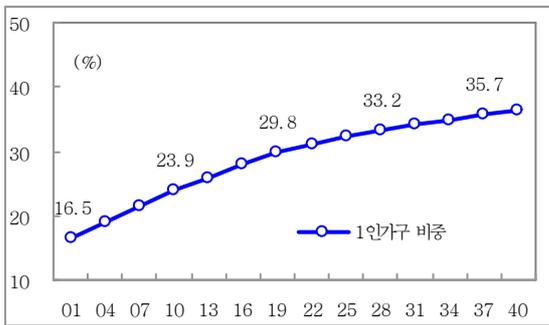
* 1인가구 비중(장래가구추계, %) : ('00)15.5 ('10)23.9 ('15)27.2 ('19) 29.8

* 주된 가구형태(인구주택총조사): ('90~'05) 4인가구 → ('10) 2인가구 → ('15) 1인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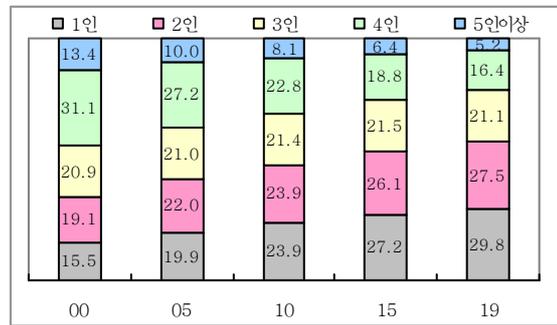
○ 앞으로도 지속 증가 예상 → OECD 수준 상회 전망

* 주요국비중(% OECD('15년)): (핀란드)41.0 (독일)37.3 (일본)34.4 (미국)26.7 (OECD)30.6

< 1인가구 비중 추이(장래가구추계) >



< 가구원수별 비중(장래가구추계) >



②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 대응 필요

○ 1인가구는 비중이 가장 높아졌으나, 다인가구에 초점 맞춘 정책 골격 지속

○ 1인가구 관련 정부 정책을 종합 점검하여 체계적 대응 필요

➔ 이에 따라 범부처 “1인가구 정책 TF* (20.1.17~)”를 구성·운영

※ 기획재정부 1차관을 팀장으로 총괄분석반, 복지고용작업반, 주거작업반, 사회안전작업반, 산업작업반 등 5개 작업반으로 구성

[참고1] 1인가구 변화 특징 및 증가 원인

① (변화 특징) 비중은 청중년층, 절대수는 고령층 중심으로 증가

① (비중) 연령대별 1인가구 비중은 대체로 전연령대에서 증가, 20~30대에서 크게 증가한 반면 70대이상 가구는 보합 수준

< 각 연령별 전체 가구에서 1인가구 비중 및 증감 (% , %p, 장래가구추계) >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00년(A)	15.5	39.0	11.0	7.8	9.8	19.3	37.4
'19년(B)	29.8	73.8	31.7	20.6	21.1	25.8	37.4
차이(B-A)	14.2	34.9	20.7	12.9	11.2	6.5	△0.1

② (규모) 1인가구수는 쏠 연령대에서 고르게 증가, 특히, 고령화로 70대 이상 고령층에서 가장 큰 증가폭 기록

< 연령대별 1인가구수 및 증감 (만가구, 장래가구추계) >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00년(A)	225.5	57.3	42.8	29.7	24.9	35.0	35.8
'19년(B)	598.7	110.5	97.5	88.4	100.8	89.4	112.1
차이(B-A)	373.2	53.2	54.7	58.7	75.8	54.4	76.3

② (증가 원인) 연령별로 다양하며, 사회구조적 변화에 주로 기인

① 청년층은 ¹⁾他 지역으로 진학·취업을 통한 분리·독립과 ²⁾미혼·만혼·비혼주의 확산으로 크게 증가

* 1인 가구 중 미혼비율 상위 市道('15): (1위) 서울 59.8% (2위) 대전 53.2%

* 평균 초혼연령('00→'18): (남성) 29.3→33.2세 (여성) 26.5→30.4세

② 중장년층은 비혼주의 확산, 이혼, 맞벌이·자녀교육을 위한 기러기 부부 증가 등 여러 요인이 혼재하며 증가

* 1인가구중 미혼가구 비중('00→'15, %) : (40대)28.8→56.3 (50대)7.7→22.0

③ 노년층은 사별 등으로 인한 가족구성원 탈락이 주원인

< 연령대별 1인가구 형성 원인 >

연령대별	가족관계	직접적 원인	구조적 변화
청년층	분리·독립	비혼·만혼	결혼 가치관 변화
중장년층	가족 해체	비혼, 이혼, 기러기	경제능력, 자녀교육
노년층	가족 구성원 탈락	사별	고령화, 기대여명 차이

Ⅱ. 5대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시사점

- ◇ 1인가구가 주된 가구형태가 되며 소득·돌봄, 주거, 안전, 사회적 관계망, 소비 등 5대분야 정책환경 변화

① [소득·돌봄] 소득, 건강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

- 1인가구는 소득과 자산 수준이 전체 평균의 36% 수준에 불과

*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가구는 1인가구가 77%, 2인가구가 15% 차지

- 건강 등 돌봄과 지원이 시급한 **독거노인**도 빠른 속도로 증가

* 65세 이상 1인가구(만가구) : ('00)54.4 ('10)99.1 ('20)158.9 ('30)258.6 ('40)362.3

< 1인가구 소득·자산 비교('19 가금복) >

	가구소득	가계자산
전체평균	5828만원	4억 3191만원
1인가구	2116만원	1억 6055만원
1분위	1104만원	1억 3146만원
5분위	1억 3754만원	9억 4663만원

< 65+ 1인가구수(장래가구추계) >



- ➔ 취약 1인가구의 **기본생활 보장 강화**, 소득 지원 외 건강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 지원 등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

※ 단, 모든 연령대에서 1인가구의 소득이 기타 가구에 비해 열악한 것은 아님

- 가구원수를 감안하여 조정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으로 보면, 1인가구가 다인가구 대비 30·40대는 양호, 50대 이상은 열악

< 연령대별 월평균 가계소득 및 균등화처분가능소득 (만원, 19.4/4분기, 가계동향) >

	가계소득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전체	1인가구	2인이상 가구	전체	1인가구	2인이상 가구
20대 이하	251.5	208.5	350.2	198.2	191.0	204.9
30대	442.8	269.9	496.0	237.4	239.8	237.1
40대	508.4	331.4	532.6	249.4	292.5	247.7
50대	504.0	241.7	569.2	279.3	215.2	284.4
60대	341.4	160.1	435.7	236.9	148.0	254.6
70대 이상	159.0	108.6	213.8	124.6	99.8	136.4

② [주거]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필요

- 1인가구는 자가 거주 비중이 34%로 전체 가구 대비 △22.8%p 낮은 반면 월세 비중은 42.1%로 19.2%p 높음

< 1인가구 주거 유형 비중('15년 기준) >

구분	자가	전세	월세		사글세	무상
			보증금 有	보증금 無		
전체 가구	56.8	15.5	20.3	2.6	0.8	4.0
1인 가구	34.0	16.0	36.0	6.1	1.8	6.0

- 한편,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공유형주택***이 점차 확산

* 개인이 방과 화장실은 별개로 사용하고, 거실 등 공용공간을 타인과 공유

* 전국 셰어하우스 규모(개): ('16)216 ('17)487 ('18)772 ('19.6월)1,020

➔ 1인가구 주거안전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새로운 주거모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추진

③ [안전]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치안서비스 강화 필요

- 1인가구는 다인가구 대비 상대적으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범죄에 취약

* 범죄피해율은 전체가구는 3.7%이나 1인가구는 5.4% 수준이며, 여성 청년 1인가구가 남성에 비해 주거침입피해를 당할 가능성은 11.2배(형사정책연구원, '17년)

- 1인가구 스스로도 주변환경에 대한 **방범상태 만족도**가 다인가구에 비해 **저조한 측면**

* 방범상태에 대한 만족도(%), 보건사회연구원, '16년)

[다인가구] 중년 82.5 노년 81.5 청년 81.0 [1인가구] 중년 75.8 노년 78.2 청년 77.1

➔ 1인가구가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치안, 방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노력 강화

④ [사회적 관계망] 공동체와 연계 강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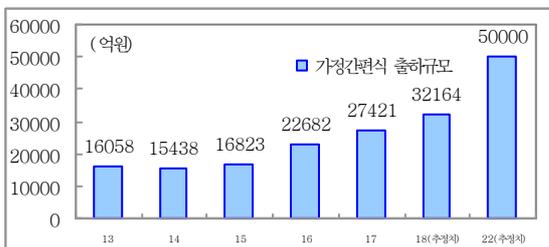
- 1인가구의 사회활동 참여율은 23% 수준에 불과하며 하락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고립, 고독사** 문제로 이어질 우려
 - * 1인가구 사회활동참여율(% , 인구주택총조사) : ('10) 26.6 → ('15) 23.3
 - [전체가구 / 1인가구] 31.0 / 23.3, [1인 남성 / 여성가구] 25.0 / 21.7
-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정확한 실태조사나 관련 정부 정책은 부재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하는 실정
 - * 이러한 인식하에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20.3.31 제정, '21.4.1 시행 예정)

➔ “외로움→우울감→자살·고독사”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 강화**를 위한 사업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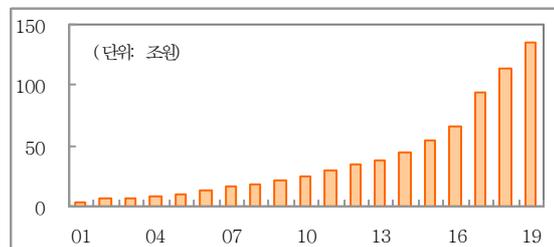
⑤ [소비] 1인가구 관련 신산업(Solo-Economy) 육성 필요

- * 소포장 제품, 간편 가정식, 플랫폼 기반 배달 서비스, 온라인 판매시장 등
- 1인가구 증가세에 개인선호·편리 중시 문화 확산, 디지털 기술 발전이 결합하여 **제품·서비스 소비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화
 - 음식 소비 분야에서 소비패턴 변화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e커머스 등 **온라인 판매 시장**도 급성장중
- 한편,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에서 가속화되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전망

< 가정간편식 출하규모 (농촌경제연구원) >



< 온라인쇼핑 거래액 추이 (통계청) >



➔ 1인가구 증가를 기회요인으로 삼아 **변화된 소비행태**에 맞춘 **산업 활성화** 및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

Ⅲ. 1인가구 대응 정책방향 및 고려사항

1 정책 기본방향

정책
목표

- ▶ 1인가구 증가로 인한 경제·사회적 변화에 선제적 대응
- ▶ 취약 1인가구의 빈곤, 사회적 고립감 등 삶의 질 개선

5대
분야

생활
기반별

정책
과제

① 소득·돌봄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 자산형성지원사업 재구조화(5→2개)
- 24시간 돌봄서비스 추진
- 정신건강, 치매검진 등 돌봄 강화

② 주거

- 청년·고령층 맞춤형 지원
- 공유주택 활성화 기반 마련
-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후 가구수요에 맞게 공급
- 별도 거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원 검토

③ 안전

- 사전 예방체계 확충
 -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예방체계 고도화
 -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집중관제, 신상정보 공유 등 밀착 관리
- 즉각 대응시스템 구축
 - 신속·민감대응시스템 전국 확산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활용

④ 사회적 관계망

- 생애주기별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프로그램 다양화·확대
- 고독사 예방 노력 강화

⑤ 소비(Solo Economy)

- 간편식품산업
 - 시장 활성화 기반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 및 지원 확대
- 외식업
 - 1인가구 메뉴개발 등 컨설팅 지원
- 생활소비재·스마트홈 산업
 - 디자인 등 맞춤형 상품 개발 유도
- 온라인 판매 산업
 - 중소·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진출 및 수출 지원 강화
- 로봇 산업
 - 돌봄로봇 등 관련 상품 공급 활성화

+

실태
조사

- 1인가구 정확한 현황, 정책수요 파악 위한 실태조사 강화
 - 상세분석자료 발표, 기존 조사체계 내실화 등

2 고려사항

① 취약 1인가구는 지원하되, 1인가구를 장려하는 것은 아님

- 1인가구 정책은 **취약 1인가구**를 **보호**하는 것이 주 목적이며, 우리나라 가구형태를 1인가구로의 전환을 장려·유도하려는 것은 아님
- 각종 경제·사회적 위협에 노출되고, 기존 가족체계 속 돌봄과 보호를 받기 어려운 **취약 1인가구**가 **주요 정책대상**

②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상충되지 않도록 섬세히 접근

- 건강한 공동체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상충** 소지
- 따라서 출산 장려 등을 위해 **다인가구를 우대하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 필요

③ 1인가구 정책 대응 노력은 향후에도 지속될 계획

- 1인가구 증가 문제는 인구·가구 등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과제로서 1회성 대책을 통해 **단시일내 해결**하기는 **어려움**
 -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향후 발생가능한 제반 이슈 등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
- ⇒ 다만, 1인가구에만 한정하지 않고 인구·가구구조의 전반적 변화에 관한 정책 대응 차원에서 **통합적 접근** 필요

* 인구정책 T/F를 통해 관련 정책을 지속 발전시켜나갈 계획

④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

-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하는 과제이며,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1인가구의 유대감 강화, 안전 등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중**
- * 서울시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 과제 등을 담은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발표('19.10월)
- 지자체의 1인가구 관련 우수한 프로그램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참고2] 주요국 1인가구 규모 및 관련 정책 현황

※ 해외 재경관을 통해서 1인가구 규모 및 관련 정책 조사('20.2월)

□ 해외 주요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1인가구 비중이 높은 수준

- 다만 해외 주요국은 1인가구 증가가 점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별도 대책보다는 사회안전망을 통해 대응

구분	1인가구 규모	주요 정책
미국	28.4% (19년)	▶ 1인가구 관련 미 정부의 별도 정책은 없으며, 관련 연구도 부족
영국	29% (19년)	▶ 별도의 정책을 마련하여 대응하지 않음 ▶ 기존 사회보장 및 안전망제도(공공임대주택, 취약계층 보호주택 등)를 통해 보호 ▶ 최근 “외로움(loneliness) 대응전략” 마련하여 추진 - 이혼, 사별, 실직 등에 대응하여 2천만 파운드 규모 기금조성, 사회적 안전망과 연대성 제고 정책 마련
일본	27.7% (18년)	▶ 1인가구에 특화된 종합대책은 없음 ▶ 고령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이 간접적으로 포함된 고령화 대책 추진
프랑스	36% (16년)	▶ 1인가구에 한정된 별도의 정책은 찾기 어려우나, 1인가구에 대한 별도 지원기준은 존재 ▶ 미망인 수당, 활동연대수당, 주택보조수당, 노인 연대수당, 사회적 지원수당, 청년 연대수당 등 지원
독일	41.9% (18년)	▶ 1인가구 자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수단은 찾기 어려움 ▶ 다만, 1인가구가 저소득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거, 복지, 의료 등 취약계층 정책으로 지원
러시아	25.7% (10년)	▶ 1인가구 관련 별도의 대책 부재
홍콩	18% (16년)	▶ 1인가구만을 위한 별도 대책은 없으며, 주로 취약계층 대상 복지정책 추진중

[참고3] 지자체별 1인가구 지원정책 (대표사례)

서울	서울	1차 1인가구 지원 기본 계획('19~'23) 발표('19.10) - 3대 목표, 17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가구 지원조례(전국 최초, '16) 자치구별 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 및 온라인 플랫폼 도입('20) 소셜다이닝 확대('23년 75개소 목표) 1인가구 임차보증금 사업(연2%, 이자 50% 시부담)
	강남	1인가구 커뮤니티 센터 (전국 최초 설치, '1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아리, 커뮤니티, 취미생활 등 지원
	강동	1인가구 긴급복지 지원 대상확대('2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과진료비 최대 100만원, 이사비용 최대 30만원 등
	관악	청년 주거지원('2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이 7,500만원 미만 전월세 계약시 중개보수료 0.1%p 감면
	영등포	중장년 사회복귀('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시원 남자들이 봉사하는 밥상
	강북	'때로는 혼자! 때로는 같이!('2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40세대 자기돌봄 프로그램 (홈파티 음식만들기 등)
경기	경기	1인가구 지원계획('20.2) - 외로움·고립 극복 프로젝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친구만들기, 반려동물 돌봄지원 마을공동부엌, 행복나눔터 운영 혼(자) 라이프 꿀팁 교육 콜벳 서비스 등 건강지원
	수원	체감형 안전도시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싱글우먼 하우스 케어('13) (노인) U-Care 서비스('11)
	성남	생활지원 서비스 등('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 내부 무거운 짐 옮겨주기 등
대전	-	전시회, 생활기록 프로젝트('2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가구 관련 일상의 모습을 글과 영상으로 공유
대구	달성	중년기 1인가구 생활지원 ('1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생설계, 생활정보 제공 (건강가정지원센터)
광주	-	청년 1인가구 지원('2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물품 배송(10만원 한도)
부산	-	청년 월세 지원('2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34세 청년 월세 10만원 지원
강원	원주	노인·여성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 응급안전알림, 친구만들기('19) (여성) 안심귀가 보안관 동행('20)
경북	포항	무연고 1인가구 지원 ('1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지정 및 주거, 병원 동행과 진료비 지원
경남	창원	주거·안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공유주택 '거북이집'('20.4) 비상벨 설치와 안전귀가 지원('17)
전북	전주	전주형 사회주택 (서울제외 지방 최초,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이 공급 청년, 여성 등 1인가구 주거지원
전남	목포, 순천, 나주, 무안	고독사지킴이단 ('18, 전국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대학생들로 구성된 지킴이단이 직접 노인안부살피기 등 실시
제주	서귀포	장년층 1인가구 조사 및 위험군 조기지원('19,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세이상 64세이하 1인가구 생활실태 조사

IV. 주요 추진과제

1 5대 분야 생활기반별 맞춤형 대응

◇ 1인가구 생활기반(소득·돌봄, 주거, 안전, 사회적 관계망, 소비)별로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

1. 소득·돌봄

◇ 기초생보 개편, 자산형성 지원 등을 통해 취약 1인가구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24시간 케어·정신건강·치매검진 등 돌봄 확대

①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 수립 단기

○ 모든 국민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해 의료·주거·교육·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용中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 수혜자는 1인가구로서, 기초생보 지원 확대를 통해 1인가구 복지 강화

*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가구는 1인가구가 77%, 2인가구가 15% 차지

☞ 수급자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 수립(중생보위, 8월)

2 취약가구 자산형성 지원사업 재구조화 중장기

- 현재 청년 등 취약계층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5개 통장사업 운용중
 - * 희망키움통장 I·II,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내일키움통장
- 통장간 사업성격이 유사하고 구조가 복잡*하며, 통장가입자의 이해도가 낮아 사업 인지도 및 효과성 제고 필요
 - * 통장별로 대상·매칭재원·매칭비율·지원조건 등이 다양·복잡

☞ 청년 등 취약계층의 탈수급과 빈곤 예방효과 제고를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 재구조화** 추진 ('22년 시행 예정)

- * ① 기존 5개 통장사업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자>를 기준으로 2개의 통장으로 통합
- ② 재정 중립원칙하에 통장간 매칭비율 일원화(예 1:3) 검토

< 자산형성지원사업 개요 >

구 분	희망키움통장 I (‘10~)	희망키움통장 II (‘14~)	내일키움통장 (‘13~)	청년희망키움통장 (‘18~)	청년저축계좌 (‘20~)
가입 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 (15~39세)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15~39세)
본인 저축	월 5/10만 원	월 10만 원	월 5/10/20만 원	근로소득공제금 10만 원	월 10만 원
정부 지원	가구소득비례 (평균 351,000원, 최대 646,000원)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최대 10만원)	청년 본인 소득비례 (평균 316,000원, 최대 523,000원)	본인 저축액에 1:3 매칭
기타 지원	민간매칭금	없음	자활사업단 대출액에서 추가지원 (평균22만원)	민간매칭금	없음
3년 평균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평균) 1,695만 원 (최대) 2,757만 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 원 포함	720만 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	(평균) 2,232만 원 (최대) 2,340만 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	(평균) 1,569만 원 (최대) 2,314만 원 + 이자 * 근로소득공제금 360만 원 포함	1,440만 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
지원 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3년 이내 탈수급 또는 일반노동시장 취·창업 등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교육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3 24시간 순회 돌봄서비스 도입 중장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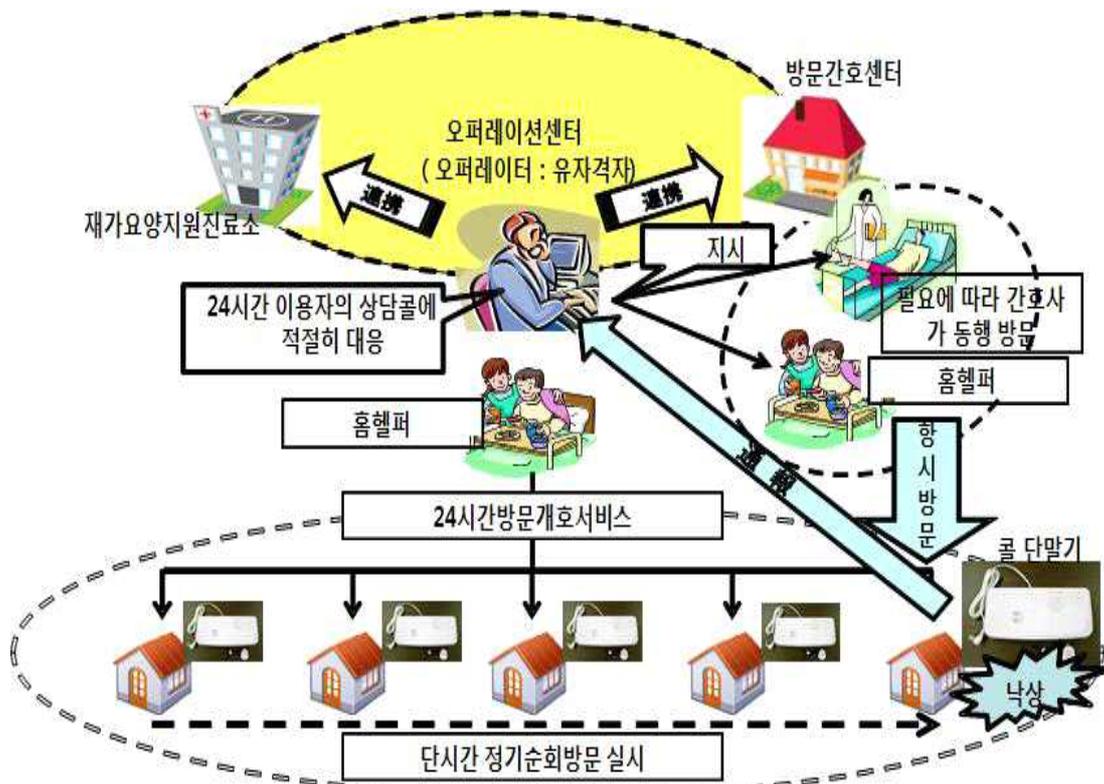
- 장기요양수급자 등의 경우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나, 現 제도하에서 가족부재시간, 야간 등에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

* '19년 장기요양수급자 77.2만명 중 17.6만명(22.8%)이 1인 가구

- ☞ 가족부재시간 및 야간시간대 돌봄 제공을 위해 1일에 단시간(20~30분간) 수시로 방문하는 24시간 순회돌봄서비스 도입 추진

- ▶ 정기순회돌봄센터(사회서비스원, 건보공단 지사 활용 검토)에 소속된 돌봄팀(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이 권역 내 수급자를 케어
 - ▶ 독거 중증 수급자, 노인부부가 수발자인 수급자, 맞벌이 등으로 주간시간 홀로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도입 검토
- ※ '20년 모델 연구용역 개발 완료 후 시범사업 등 추진

< 일본에서 운용중인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간호서비스 운영도 >



4 정신건강상담서비스 제공 확대 단기

○ 빈곤, 세대갈등, 입시·취업 등 정신건강 위협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1인가구의 신체적 돌봄 외 **정신적 돌봄 수요 확대**

▪ 다만, 정신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관련 의료 이용 저조

* 우리 국민 4명 중 한 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 이 중 22.2%만 정신건강서비스 이용(2016, 정신질환실태조사)

☞ 카톡, 이메일 등 **온라인 상담 도입**

+ **주민센터**를 통한 찾아가는 **방문상담서비스 제공 확대**('20.下)

- ▶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정신건강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정보 안내 및 상담매뉴얼 마련, 온라인 상담 실시, 전문의 연계 등 지원
- ▶ 읍면동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복지대상자 발굴, 직접 방문상담을 통해 맞춤형 정신상담서비스 제공

5 독거노인 치매조기검진서비스 제공 확대 단기

○ 현재 **치매국가책임제**를 국정과제로 삼아 치매안심센터 확충(전국 256개소), 중증치매환자 본인부담 경감노력 등 추진中

▪ 1인가구인 **독거노인**은 **대표적 치매 고위험군**으로서 검진 서비스를 확대하여 조기에 치매 여부 점검 필요

☞ **치매 핵심 고위험군인 독거노인 대상 조기검진서비스 제공 확대**

- ▶ 치매안심센터에서 경로당,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등에 전문인력을 수시로 파견하여 선별검사 및 인지지원 프로그램 제공
 - 중앙치매센터(국립중앙의료원)와 노인복지관협회간 MOU체결('20.5월)하여 기관간 연계된 치매 신규프로그램 발굴
- ▶ 미수검 독거노인이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생활지원사 안내**
- ▶ 생활지원사 안전확인 서비스에 인지상태 점검 포함 → 인지상태 악화시 관내 치매안심센터에 대상자 상황 공유, 센터는 접수 정보에 따라 진단검사 시행

2. 주거

◇ 1인가구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유형 주택 활성화 등 주택공급체계 변화 지원

1] 청년·고령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단기·중장기

○ 인구·가구 구조적 변화로 수요자별 희망 주거수요 다양화

☞ 청년·고령층 등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추진

① (청년) 일자리 연계주택, 기숙사형청년주택, 노후고시원리모델링 등 청년 주거지원에 효과적인 청년특화주택 공급 확대

< 청년특화주택 공급계획 >

	'18~'19	'20	'21	'22	'23~'25	계
일자리연계주택	4.6천호	6.5천호	8.6천호	10.3천호	3만호	6만호
기숙사형청년주택	1천호	1천호	1.5천호	1.5천호	5천호	1만호
노후고시원리모델링		1천호	2천호	2천호	5천호	1만호

② (고령층) 문턱제거, 안심센서 등 무장애설계를 적용한 고령자 복지주택, 고령자 리모델링 등 고령층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 고령층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계획 >

	'18~'19	'20	'21	'22	'23~'25	계
고령자 복지주택	1천호	1천호	1천호	1천호	6천호	1만호
고령자 리모델링*	1천호	1천호	1.5천호	1.5천호	5천호	1만호

*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문턱제거 등 무장애 설계를 반영한 고령자 주택으로 리모델링 후 공급

< 청년·고령자 맞춤형 주택 예시 >

부천 웹툰영상센터	캠퍼스 혁신파크	안동운흥 공공실버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 웹툰작가 등 문화예술인 · (특화) 웹툰 창작실, 회의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 대학생창업가 등 · (특화) 메이커스페이스, 창업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 저소득층 고령자 · (특화) 무장애설계 실버복지관

2 공유주택 활성화 기반 마련 단기

○ 1인가구가 증가하며, **공유주택**이 새로운 주택 공급형태로 대두

* 개인독립 공간(수면+욕실), 주방·세탁실·커뮤니티 등 공용시설 공유형태

☞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에 양질의 공유주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지원 강화

① (법·제도) 주택법에 **공유주택 정의**를 신설(20.下)하고, 공공부문에 적용중인 **공유주택 공급 가이드라인***을 민간분야로 확산('20.6월)

* 1실당 최소면적, 거주 인원당 최소면적, 편의시설·욕실·대피공간 설치기준 등

② (사업지원) 공유주택 사업 분야 스타트업,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공유주택 모태펀드 신설**('20.11월)

* 모태펀드 국토교통혁신계정 등을 통해 지원하고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료, 장기 임대조건 등을 활용하여 공공성 확보

< 공유주택 모태펀드 운용구조 예시 >



3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여 가구수요에 맞게 공급 중장기

○ 공공임대주택 공급시 좁은 면적에 가족 여러 명이 함께 살거나, 1인가구가 넓은 면적에 거주하는 사례 발생

☞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계기로 **가구원수**에 따른 **대표면적**을 설정하고, 수요에 따라 **적정하게 공급**('21년 시범사업→'22년 전면시행)

< 현 행 >			< 개 선 >		
기존 유형			통합유형		
유형별	평균면적	주거복지로드맵 상 공급비율	가구원수	대표면적	공급비율
영구	26㎡	8.9%	1인	18㎡	10%
국민	37㎡	30.4%	1~2인	26㎡	36.9%
행복	32㎡/37㎡	25.0%/35.7%	2~3인	36㎡	25.5%
			3~4인	46㎡	15.3%
			4인~	56㎡	12.3%

<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

- ▶ (추진개요) 기존 복잡한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임대료체계 등 제도 전반을 수요자관점에서 개선



- ▶ (입주자격 통합) 기존 영구·국민·행복 입주자가 모두 입주 가능한 중위소득 130%이하 등으로 입주자격 단일화
- ▶ (소득연계형 임대료) 부담 능력에 따라 최저소득계층은 시세 35%, 일반은 시세 65%~80% 수준의 적정 임대료를 책정토록 개선
- ▶ (공급기준 통합) 통합공급 기준을 마련(기존 우선공급 대상포함)하고, 청년·신혼은 6~10년, 고령·수급자 등은 희망기간 거주토록 설정
 - * 가구원수별 면적과 공급비율 등도 설정
- ▶ (향후 일정) '21.上까지 공급기준·임대료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21.下 시범사업 후 '22년 사업승인 분부터 전면 시행

4 기타 과제 단기

- ❶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 20대 청년이 부모와 **별도 거주** 하는 경우 **주거급여 분리지급 검토**(‘21년~)
 - * (現) 부모 + 청년 통합지급 → (改) 부모, 청년 별도지원
- ❷ 공공주택사업자가 오피스·상가 등을 1인용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해당 1인용 주거에 필요한 **추가 주차장 설치 면제**(‘20.9월)
- ❸ 1인용 주거공급 활성화를 위해 **다중주택 허용규모 확대**
(바닥면적 330→660㎡, 3→4층, ‘20.6월 입법예고)
- ❹ 안전·주거여건이 취약한 노후고시원 거주자가 민간주택 이주시 **보증금 저리 용자**(금리 연 1.8%, 5천만원限 용자, ‘20.1~)

3. 안전

◇ 여성 등 취약 1인가구의 안전 확보를 위해 ①예방체계 강화 + ②위기 발생시 신속대응 '투트랙(two track)'으로 접근

① 여성 등 취약 1인가구에 대한 사전 예방체계 확충 단기

☞ 치안데이터를 활용한 대응시스템 구축 + 위험 대상자 집중관제 + 범죄 관련 통계·인프라 개선 등 추진

① 112신고, 범죄통계 등 각종 치안데이터를 지역 정보와 융합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 통해 예측적 범죄예방시스템 구축·고도화(20.下)

* 여성 1인가구 위험지역을 관리하고, 범죄유형 분석 및 위험 정도에 따라 경찰 순찰선을 재배치하여 위험지역에 집중 배정

②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에 접근 또는 거주하는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 집중관제, 신상정보 공유 등 밀착 관리(20.下~)

- ▶ (집중관제) 일반 보호관찰대상자보다 위험성이 높은 재범고위험군 등에 대해 세밀한 이동경로 및 일탈요인을 상시 분석하여 대응
 - 담당 보호관찰관 밀착 지도감독 +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실시간 동선 확인 후 이상 발생시 즉각 처리
- ▶ (신상정보 공유) 신상, 정신병력, 범죄성향 등 전자감독 대상자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간 공유하여 밀착 관리
 - 그간 부처간 칸막이 등으로 정보 공유에 소홀했던 경찰, 법무부, 해경,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이 공조체계 구축
 - 57개 보호관찰소와 255개 경찰관서에서 주기적 협의회 개최 및 즉각 대응 모의훈련 실시

③ 법무부, 경찰청, 여가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여성 범죄 관련 부처간 통계 기준 통일, 신종범죄 통계 생산 등 통계 개선 추진(20.下)

④ 취약 1인가구에 대한 안전시책을 마련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검토(21년)

2 위기상황 발생시 즉각 대응시스템 강화 단기

☞ 탄력순찰 활성화, 민·경 협력순찰 등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경찰 대응 시스템 구축

① 서울 지방경찰청에서 시범 추진중인 신속·민감대응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 ('20.下~)

< 신속·민감대응시스템 >

- ▶ (시행배경) 여성대상범죄 신고접수 이후 피해자 관점에서 신속·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현장대응 연속성이 단절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응 조치 마련
- ▶ (주요조치) 부서간 업무 인수인계 강화, 즉일 대응체계확립, 사건 모니터링 강화, 사건 진행상황 안내 철저 등
 - 팀·부서간 업무 인수인계시 팀장간 대면, 인수인계서 의무작성 등을 통해 현장대응 단절현상 사전에 방지
 - 신속하게 초동조치를 실시하는 등 사건 인계 또는 접수시 즉일수사 원칙 적용
 - 접수→출동→초동조치→종결 과정에서 112상황실이 컨트롤타워로 지휘
 - 피해자가 먼저 문의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단계별로 사건 진행상황 안내 철저
- ▶ (확대계획) '19.8월 시범운영 → '19.9월 서울 전 경찰서 운영 → '20.7월 전국 확대

② 위급상황시 CCTV, 여성안심앱 및 112·119 상황실을 즉시 연계·지원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연계망 구축('20.11월)

- * 여성안심앱 신고→사용자 위치정보 전송→지자체 스마트시티센터CCTV로 현장확인→경찰출동
- * '20.11월 서울·안양시에서 시범사업 실시 → '21.下 전국 108개 지자체로 확대

③ 경찰청·지자체 등이 협업하여 여성안전제도(여성안심구역, 여성안심귀갓길 등)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취약지역 발굴 및 환경 개선 추진('20.下)

- ▶ (여성안심구역) 경찰서별 치안여건 분석과 범죄예방진단 등을 통해,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재개발지구 등 여성범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현재 498개소) 하여 주변 환경 개선, 경찰관 순찰 강화 등 시행
- ▶ (여성안심귀갓길) '13년부터 야간 시간대 여성 대상의 성범죄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정류소역 등에서 주거지까지 '여성안심귀갓길' 지정 운영(현재 2,193개소)

4. 사회적 관계망

◇ “외로움→우울감→자살·고독사”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차단을 위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 강화

1 생애주기별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단기

☞ 고령층 외 청년·중장년층 등 전연령대로 확산되고 있는 외로움, 고립, 우울감 문제 등 해소 위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 강화 지원

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으로 1인가구 대상프로그램을 생애주기별로 다양화하여 지원(‘20.下~)

* 1인가구 프로그램(‘19년) : 총 71개 프로그램, 6,602명 참여

< 생애주기별 1인가구 지원프로그램 (예시) >

생애주기 구분	주요 프로그램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진입 예정자 대상 정서·경제·생활유지 등 독립생활 준비교육 ▶ 일, 가정, 건강, 주거 등 다양한 분야 커뮤니티, 정책 제안 등 청년 1인 가구의 소통과 공감의 장인 ‘청년참여플랫폼’ 운영 ▶ 청년 주거가 집중된 공동주택(예: 행복주택)에 인문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중장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홀로서기를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 자기돌봄 및 일상 생활 유지관리 교육, 생애후반기 진입 준비 교육 ▶ 가족상담전화(1644-6621) 및 가족상담인력을 통해 원 가족과 관계 증진을 위한 상담, 교육 등 지원 ▶ 운동·여가·건강 등 1인가구를 포함한 동아리활동 지원
고령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상담, 재산, 인생되돌아보기 등 웰다잉(Well-Dying) 준비 교육프로그램 마련 ▶ 고령층 안전 확인, 심리적 안정 지원 등을 위한 데일리콜 113(매일1, 한번1, 삼분동안 3 대화) 서비스 추진 검토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어르신 생활체육프로그램, 시니어 꿈꾸는 여행자 등 1인가구에 특화된 문화예술, 체육, 여행 등 여가프로그램 제공

- ② 1인가구, 한부모가족 등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등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 지원 확대 ('19년 5→'20년 64개소)

2] **고독사 예방 노력 강화** 중장기

- 고독사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20.3.31)
- ☞ **고독사 예방법 시행시기('21.4월)에 맞춰 하위법령 완비, 관련 실태조사 실시** 등 기본계획 사전조치 시행
 - * 하위법령 제정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20.下, 복지부)
 - * 고독사 예방 전담조직 신설 등도 함께 검토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목적)**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
- ▶ **(기본계획 수립)**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시행
 - *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추진체계,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청년/중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고독사 위험자 조기발견 및 지원체계 구축,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조사연구, 전문인력 처우, 자원분배 등 포함
- ▶ **(예방대책)** 5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고독사 통계작성 및 분석, 고독사위험자 지원대책 마련·이행 등
 - *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들 수 있으며, 교육, 홍보, 상담, 교육 실시
 - * 기타, 명예·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전문인력 양성, 비밀누설 금지, 비용지원, 벌칙 등

5. 소비

◇ 식품산업, 외식업, 온라인판매업, 생활소비재, 로봇 산업 등 1인가구 관련 유망산업 육성 추진

1 [간편식품산업] 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 및 고품질화 유도 [단기]

① 밀키트*(Meal+Kit) 식품유형 신설(식약처), 간편식제품 국제규격 마련 추진(농식품부) 등 간편식품 관련 기본 제도 정비('20.下)

* 요리에 필요한 손질된 식재료, 양념, 조리법을 세트로 구성 및 판매
→ 현재는 즉석조리식품에 포함되어 있으나 기준·규격 준수가 어려움

② 고부가가치 간편식품 핵심기술 확보 및 제품개발*을 지원하고, 수산물분야 간편·가공식품 개발** 확대('20년 9→'21년 16개)

* 냉·해동 안정화 및 고온·고압 멸균 등 가공기술 고도화, 친환경 포장소재 개발 등

** 해조류·피조개 스낵, 간편 레토르트 식품 등 9개 제품 개발(경상대 산학협력단 등)

- 수산물 활용 메디푸드를 개발하고, 상품화를 위한 인체적용 시험 및 기능성 개별 인정 획득 등 추진('21년)

* 넙치(혈압조절), 팽생이모자반(미세먼지 방어), 굴(뼈건강) 등 5개 소재 연구

③ 간편식품업체의 안정적인 원료 수급을 위해 생산자단체와 기업간 계약재배를 활성화하고, 국산농산물 활용 기반 확대

* 반가공업체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 지역 농특산물 활용 반가공·소재화 기술 개발 등

2 [외식업] 1인가구 외식인프라 구축 지원 및 홍보 강화 [단기]

① 외식업체가 비대면·1인 외식 등 변화된 외식소비 환경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메뉴개발, 좌석배치 등 컨설팅 지원('20.9월)

② 외식소비 촉진을 위한 온라인 이벤트 '푸드페스타'에서 소비자 추천 "혼밥하기 좋은 동네식당" 홍보이벤트 추진('21년)

3 [생활소비재 · 스마트홈산업] 1인가구 관련 상품 개발 지원 단기

- ① 디자인 우수제품 선정*시 1인가구 분야를 신설하고, 인력양성 과정에 1인가구 특화 디자인 커리큘럼 개발 추진('21년)

* 굿디자인어워드(한국디자인진흥원) 시상에 1인가구 분야 신설 검토

- ② 1인가구 수요를 포함한 스마트홈 서비스 실증사업*, 무인배송 등 AI기반 맞춤형 서비스 개발** 등을 지속 추진

* IoT가전기반 스마트홈 실증형 기술개발('19~'22, 236억원)

** AI기반 스마트하우징플랫폼 및 서비스기술개발('20~'25, 240억원)

4 [온라인 판매] 소상공인 · 자영업자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 단기

- ①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온라인 채널 입점 등 원활한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

* 전문가 진단 온·오프라인 홍보, TV-홈쇼핑 T-커머스 V-커머스 등 온라인 채널 입점 등 지원

- ② 행복한 백화점, 소상공인방송 등 소상공인 판매지원 인프라에 숍스트리밍 등이 가능한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신설('20.4분기)

* 숍스트리밍(Shopping + Livestreaming) : 인터넷으로 보는 TV홈쇼핑 생방송 개념, 쇼호스트가 제품을 소개하고, 시청자들은 방송을 보면서 제품 구매

- ③ 중소기업의 온라인 시장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온라인 수출 지원체계 확충

- ▶ 무역협회, 코트라 등과 협업하여 맞춤형 화상상담, 온라인 전시회 등 비대면 마케팅 One-Stop 서비스 지원
- ▶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된 국내 유망상품을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에 연계하는 판매 대행사업 지원대상 확대(1,500→2,500개사)
- ▶ 유망 쇼핑몰 기업을 선정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쇼핑몰로 성장하도록 기술지원·마케팅 등 적극 지원(55→85개사)

- ④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중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온라인 할인판매 지원을 위해 온라인 할인쿠폰 발급(30~40%) 등 추진

- ▶ '가치삼시다 플랫폼', '민간 쇼핑몰(약 16개)', 'TV 홈쇼핑' 등의 입점을 지원하고 온라인 할인쿠폰 발급(30~40%) 등을 통해 약 40% 수준의 할인판매 지원
- ▶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판로확보 지원을 위해 특별행사·권역별 현장 행사 추진時 라이브커머스 실시
- ▶ 공영홈쇼핑 농산물 판매 프로그램 편성비 및 생산·판매자 수수료 인하(판매 금액의 20→8%) 지원, 수협쇼핑 주요 인기수산물 25~50% 할인판매 실시

5 [로봇산업 청년·고령층 1인가구 등을 위한 서비스로봇 공급 확대] 단기

① 독거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정신적·육체적 건강, 편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로봇 보급사업** 추진

* 노인복지시설, 재가복지 서비스 등에 돌봄로봇 보급 지원('20년 700대, 40억원)

【 돌봄로봇 】



② 고령층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수술·재활로봇 특화센터 지정 및 실증 지원**

* 수술로봇특화센터(2개소) 및 재활로봇특화센터(1개소)로 지정된 병원에 로봇도입 비용의 50%지원('20년 30억원)

【 재활로봇특화서비스 】



③ 1인가구 생활을 돕는 스마트홈로봇, 반려로봇 등 다양한 서비스 로봇을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임대·공유서비스 지원**

* (예시) 제조로봇 렌탈·리프로그래밍을 서비스로봇 분야로 확대 검토('21년)

【 서비스로봇 】



2 1인가구 실태파악 강화

- ◇ 1인가구 현황, 정책수요 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1인가구 조사체계 강화

1 1인가구 현황 심층 분석 및 결과 대외 공표 단기

- 현재 국가통계중 총 43종의 조사에서 1인가구 규모, 분포, 소득, 주거형태 등을 개별적으로 조사중
 - 다만, 총괄조사가 부재하여 1인가구 관련 분야별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

< 1인가구 관련 주요 조사 >

생산부처·기관	통계 조사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동향조사, 농림어가경제조사, 사회조사, 인구주택총조사, 장래가구추계, 지역별고용조사 등
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노인실태조사, 장애인실태조사
국토부	주거실태조사
여가부	가족실태조사, 양성평등실태조사,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기 타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노동·복지패널조사

- ☞ 각 부처에 산재해있는 1인가구 관련 조사결과를 취합·분석하여 1인가구 종합 현황 통계 배포(통계청, '21.6월)

* '20년 하반기중 종합 통계에 담을 구체적 조사항목을 관계부처간 논의하여 결정

2 1인가구 사회보장 서비스 수급현황 분석 단기

- 취약 1인가구의 기본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1인가구의 정확한 사회보장서비스 수급현황 분석 필요

* 사회보장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에서 보유한 행정데이터를 취합 분석

- ☞ 행정데이터를 연계·활용하여 1인가구의 소득·돌봄·건강 등 사회보장서비스 수급현황을 파악·분석하고 정책자료로 활용('21.上)

3 인구주택총조사 및 가족실태조사 1인가구 관련 조사 강화 단기

1 인구주택총조사*에서 1인가구 관련 항목 추가 조사

* 특정 시점에 한 국가의 모든 사람, 가구, 거처와 관련된 인구·경제·사회 자료를 수집·평가·분석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

- 변화된 가구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1인가구에 한하여 **1인가구 사유, 혼자 생활한 기간** 등을 조사

* '20년 10.15~11.18일 실시 → '21.6~12월 전수(등록센서스), 표본(현장조사) 결과 공표

2 여가부 가족실태조사*에서 1인가구 관련 항목 추가 조사

*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개인·가족생활실태 파악, 필요 서비스 수요 파악을 위해 정기적으로 조사

- **1인가구 형성사유, 사회관계, 정책수요** 등을 추가 조사하여 **조사결과 발표**('21.3월)

< 1인가구 관련 조사내용 (특화 문항 12개 추가) >

구분	주요 내용
형성 사유	1인가구 이전 가족관계 및 형성사유
생활비	생활비·주거비 부담주체, 주요 지출항목, 생활상 어려움 등
가족 부양	따로 사는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양과 돌봄 실태 등
향후 계획	1인가구 삶 지속 의향, 예상되는 어려움 등
정책 수요	1인가구 관련 필요 지원 정책 수요

- 향후 단축된 가족실태조사 발표주기(5→3년, '20.5.19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1인가구 관련 조사 결과 지속 발표**

V. 기대효과 및 변화된 모습

	기 존(AS-IS)	개 선(TO-BE)
소득·돌봄	① ▶ 기초생보를 통해 소득 지원	▶ 기초생보 개편을 통한 지원 강화 추진
	② ▶ 5개 통장사업 통해 자산형성 지원	▶ 자산형성지원사업 재구조화 추진
	③ ▶ 취약 독거노인 건강돌봄 지원	▶ 24시간 돌봄 등 돌봄 범위 확대
주거	④ ▶ 청년·고령층 위한 주택공급 지속	▶ 청년·고령층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⑤ ▶ 공공임대주택 가구수요 미반영	▶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 가구수요 반영, 공급 효율성 제고
	⑥ ▶ 공유형주택 확산 초기단계	▶ 법·제도 기반 구축, 정부 지원 강화
	⑦ ▶ 부모와 별도거주 청년 주거급여 통합지급 등	▶ 별도거주 청년 주거급여 별도 지원 검토 1인용 주택 공급 확대
안전	⑧ ▶ 부처·분야별 취약1인가구 안전 관련 통계·데이터 산재	▶ 부처 협업, 데이터 융합 통해 분석·예방 시스템 구축·고도화
	⑨ ▶ 여성안심앱 등 디지털 기반 안전 강화	▶ CCTV, 여성안심앱, 상황실 등 스마트 시티 통합플랫폼 연계망 구축
	⑩ ▶ 신속·민감대응 시스템 서울지역 실시	▶ 신속·민감대응 시스템 전국 확대
사회관계	⑪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1인가구 프로그램 운영	▶ 생애주기별로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 다양화·확대
	⑫ ▶ 고독사 이슈 정부 차원 대응 부재	▶ 고독사 예방법에 따라 정부차원 고독사예방기본계획 수립 및 대응
소비	⑬ ▶ 산업별로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1인가구 관련 상품 개발 등 전환 추진	▶ Solo-Economy 활성화 위한 정부 지원 강화
실태조사	⑭ ▶ 각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1인가구 실태조사 시행	▶ 총괄분석자료를 통해 1인가구 삶의 전반적인 실태파악 가능
	⑮ ▶ 1인가구 형성사유, 정책수요 관련 조사 부재	▶ 1인가구 정책수요 등을 활용하여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 구현

Ⅵ. 추진계획

과제명	주관기관	일정
I. 생활기반별 맞춤형 대응		
1. 소득·돌봄		
①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 수립	중생보위	'20.8월
② 취약가구 자산형성 지원사업 재구조화	복지부	~22년
③ 24시간 순회 돌봄서비스 도입 (모델 개발)	복지부	'20.下
④ 정신건강상담서비스 제공 확대	복지부	'20.下
⑤ 독거노인 치매조기검진서비스 제공 확대	복지부	계속
2. 주거		
① 청년·고령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국토부	계속
② 공유주택 활성화 기반 마련		
▪ (법) 주택법에 공유주택 정의 신설	국토부	'20.下
▪ (제도) 공유주택 공급 가이드라인 민간 확산	국토부	'20.6월
▪ (사업지원) 공유주택 모태펀드신설	국토부	'20.11월
③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및 가구수요맞춤 공급		
▪ 세부기준 마련 및 시범사업 실시	국토부	'21년
④ 기타 과제		
▪ 청년·부모 별도 거주시 주거급여 분리지급 검토	국토부	'21년~
▪ 업무시설 1인용주거 개량 및 공공매각시 추가주차장 설치면제	국토부	'20.9월
▪ 다중주택 허용규모 확대	국토부	'20.下

과제명	주관기관	일정
-----	------	----

3. 안전

① 여성 등 취약가구에 대한 사전 예방체계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시스템 구축·고도화 ▪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밀착 관리 ▪ 여성범죄 관련 통계개선 ▪ 취약 1인가구 안전시책 마련 지자체 인센티브 검토 	법무부 경찰청 법무부 경찰청 법무부 경찰청 여가부 행안부	'20.下 '20.下 '20.下 '21년
② 위기상황 발생시 즉각 대응시스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민감대응시스템(서울경찰청) 전국 확대 시행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연계망 구축 ▪ 여성안전제 실태점검 강화 및 취약지역 발굴 	경찰청 국토부 여가부 등 경찰청, 지자체	'20.7월 '20.11월 '20.下

4. 사회적 관계망

① 생애주기별 사회적 관계망 형성방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가구 대상프로그램을 생애주기별로 다양화 ▪ 가족센터 건립 지원 단계적 확대('19년 5 → '20년 64개소) 	여가부 여가부	'20.下~ 계속
② 고독사 예방 노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독사 예방법 하위법령 완비 	복지부	~'21.4월

5. 소비

① (간편식품산업) 시장활성화 기반마련 및 고품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키트 식품유형 신설 등 관련 기본제도 정비 ▪ 간편·가공식품 개발 확대 ▪ 생산자단체와 기업간 계약제배 활성화 등 	식약처 농식품부 농식품부 해수부 농식품부	'20.下 '21년 계속
--	--	-----------------------------

과제명	주관기관	일정
② (외식업) 1인가구 외식인프라 구축지원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가구 메뉴개발, 좌석배치 등 컨설팅 지원 푸드페스타를 통한 홍보이벤트 추진 	농식품부 농식품부	'20.9월 '21년
③ (생활소비재·스마트홈) 1인가구 관련 상품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자인 우수제품에 1인가구 분야신설 및 1인가구 특화 디자인 커리큘럼 개발 추진 스마트홈서비스, 무인배송 등 서비스 지속개발 	산업부 산업부	'21년 계속
④ (온라인 판매) 소상공인·자영업자 온라인진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세 소상공인 온라인채널 입점 등 판로지원 소상공인 판매지원 인프라에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신설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지원체계 확충 동행세일 기간중 온라인 할인쿠폰 발급 등 추진 	중기부 중기부 산업부 중기부	계속 '20.4/4 '20.下 '20.6월~
⑤ (로봇) 청년·고령층 등을 위한 서비스로봇 공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거 고령자 등을 위한 서비스로봇 보급사업 추진 수술·재활로봇 특화센터 지정 및 실증 지원 스마트홈·반려 로봇의 임대·공유서비스 지원 	산업부 산업부 산업부	계속 계속 계속

II. 1인 가구 실태파악 강화

① 1인가구 현황 심층 분석 및 결과 공표	통계청	'21.6월
② 1인가구 사회보장 서비스 수급현황 분석	복지부	'21.上
③ 통계조사 1인가구 관련 조사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주택총조사 1인가구 관련 항목 추가조사·발표 가족실태조사 1인가구 관련 항목 추가조사·발표 	통계청 여가부	'21.6~12월 '21.3월